

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통합추진체계 구축

새누리의 진단

-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중 1/3인 720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은 국민행복경제 실현의 필수적인 조건
- 지금의 소상공인 대책은 단발성 정책위주로서 정책의 체계성과 효율성 결여

새누리의 약속

- '소상공인진흥기금'을 조성하여 소상공인 정책추진의 물적 기반 구축
- 현행 '소상공인진흥원'과 '시장경영진흥원'의 기능을 통합하여 '소상공인진흥공단'을 설치하고, '소상공인진흥기금' 운영
- 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과 함께 소상공인 연구, 장기정책방향 수립, 창업 정보 및 교육·컨설팅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 병행

새누리의 실천

- '소상공인진흥기금' 설치 및 '소상공인진흥공단' 설립 근거 마련

골목가게와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

새누리의 진단

- 골목가게와 전통시장의 인근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선 상업기반 시설의 현대화 필요
- 이를 통해 전통시장은 낙후된 시설의 상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완전히 불식시켜야 함.

새누리의 약속

- ‘나들가게’ 사업을 확산하여 2017년까지 2만개의 골목가게 현대화 완성
-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을 대폭 확대
- 전통시장 포털시스템 및 U-전통시장을 구축(인터넷 쇼핑몰)
- 소매업체와 중소기업간의 ‘매장 공유’ 모델 등 신업태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

새누리의 실천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적용시한(2016.12월 말) 연장

소상공인의 사업인프라 구축지원

새누리의 진단

- 골목가게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대해 차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물류인프라 구축 필요
- 더불어 대형유통업체가 활용하는 각종 마케팅 기법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필요

새누리의 약속

- ‘나들가게’ 통합정보센터, 소상공인 통합물류단지, 중소상인 공동구매·배송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우선 배정
- 영세 소매업체 전담MRO(소모성 자재의 공동구매시스템)서비스 시스템을 소상공인 단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개발·운영하도록 지원
- 자영업자·소상공인의 자율조직화 유도를 위하여 협동조합 활성화 전폭 지원

새누리의 실천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적용시한(2016.12월 말) 연장
- 「협동조합기본법」 발효(2012.12)를 계기로 유립식 협동조합 결성 지원

소상공인 영업 활성화 지원

새누리의 진단

- 소상공인이 구조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는 소상공인 상업활동에 대한 다양한 수요 진작 방안이 지원될 필요

새누리의 약속

-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를 기반으로 공동브랜드, 공동판매 등 공동사업 활동 활성화
- 전통시장 '온누리 상품권' 발행규모를 2017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 추진

새누리의 실천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적용시한(2016.12월 말) 연장

화물차 운송업자 지원

새누리의 진단

-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야간에 한정되어 있어, 화물차 운송이 야간에 편중
- 화물차 운송업자의 작업조건이 악화되고 사고의 위험도 높아짐.

새누리의 약속

- 모든 화물차에 대해 현재의 심야할인에 추가하여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주간 시간에도 통행료 25% 할인
- 사업용자동차의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을 통합하여 검사수수료 절감

새누리의 실천

- 「자동차안전법」 개정

택시업 대책

새누리의 진단

- LPG가격 상승 등으로 택시업계의 채산성이 극히 악화

새누리의 약속

- ‘총량제’ 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유도를 위해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감차보상을 실시
- 경유 또는 CN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여 택시연료의 다변화 지원
- 차량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검토

새누리의 실천

- 단계적인 감차 보상